

◆ 政府 施策 ◆

## '95 중전기기 산업 시책

### 1. 중전기기 산업 현황

#### 가. 일반 현황

구 분	생산 (10억원)	업체수 (개)	고용 (천명)	수 출(백만불)		
				'94실적	'95전망	증가율
○ 중전기기	3,718	2,723	94	1,105	1,210	9.5
- 중전기기	2,143	2,450	61	743	815	9.7
- 전 선	1,575	273	33	362	395	9.2

자료 : '93년도 광공업 통계 (생산, 업체수, 고용)

#### 나. 산업동향

##### ○ 시장전망

- 중전기기 세계 시장 규모는 6.7% 성장하여 2001년에 4,500억불에 이를 전망
- 우리나라는 발전설비투자, 고속철도, 지하철, 환경설비등 SOC투자 확대로 년평균 14.3%의 고 성장 전망

(단위 : 억 \$)

	'92	'97	2001	증가율(92~2001)
· 세계시장	2,500	3,400	4,500	6.7%
· 국내시장	72	145	240	14.3%

- 전선 세계시장 규모는 년평균 11.3% 성장하여 2001년에는 1,100억불에 이를 전망
- 우리나라 전선수요도 고속정보통신망, 전력지중화 사업등으로 년평균 5.7%의 안정성장 전망

(단위 : 억 \$)

	'92	'97	2001	증가율(92~2001)
· 세계시장	470	720	1,100	11.3%
· 국내시장	20	25	30	5.7%

## ○ 투자실적 및 전망

-중전기 분야 시설 및 기술투자는 전년대비 8.7% 증가한 6,008억원으로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94	'95 전망	증 가 율
총 투 자	5,525	6,008	8.7
시 설 투 자	3,506	3,399	△ 3.8
기 술 개 발 투 자	2,019	2,609	29.2

-전선류 분야 시설 및 기술투자는 전년대비 19.2% 증가한 1,550억원으로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94	'95 전망	증 가 율
총 투 자	1,300	1,550	19.2
시 설 투 자	1,130	1,321	16.9
기 술 개 발 투 자	170	229	34.7

## 2. '95 주요 시책

가. 중전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

## ○ 차세대 전력시스템 기반 구축

- 전기와 전자가 융합된 첨단시스템 개발
- 에너지 절약형 신소재와 제품개발
-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 기술개발에 주력
-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동대책 수립(중전기 발전전략)

## ○ 중전기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 중전기 시험장 건설 : 22.9KV급 실증시험장, 500MV급 단락시험설비

-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방안 강구
- 중전기기 제도의 국제화 추진
- 중전기기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 중전기기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수입선다변화, 단체수의계약품목의 해제예시제 도입
  -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추진
  - 해외기술 유통정보 공급체계 확립

나. 전선산업의 경쟁력 제고

- 광케이블의 첨단제조기술 습득 및 생산제품의 보급확대
  - 대구경 광섬유모재 제조공법 개발등
  - HDTV, CATV, ISDN 및 이동통신사업등과 연계 광케이블 보급 확대
- 저공해 난연전선의 사용의무화로 신규수요 창출
  - 저공해 난연전선 사용의무 대상시설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반영토록 추진
- 전선류 가격의 안정과 전기동의 안정적 공급
  - 동광석 및 조동의 무관세화 추진
  - 전기동의 공급안정을 위한 제련능력 확충
- 해외투자 환경조사단을 구성 투자 가능국가에 대한 환경조사
  - 동남아, 남아프리카, 중국, 페루 등

## 「重電기기 정책 研」발족

— 産 · 學 · 研 · 官 공동 관련전문가 20명 참가 —

국내 중전기기산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産 · 學 · 研 · 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전기기 정책 연구회」가 발족됐다.

통상산업부와 학계 · 연구소 · 한국전력 · 업계 · 전기진흥회 · 전기조합등의 전기관련 전문가 20여 명은 지난 3월 22日 모임을 갖고 「중전기기 정책 연구회」를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산업부 전기공업과장의 정책연구회 설립취지 설명과 각 기관·단체 현안사업 발표, 회장선출 및 중전산업 현황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정책연구회 회장은 수영전기기업(주) 배수익 회장을 선출, 앞으로 회장 주관으로 민간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이번 「중전기기 정책 연구회」의 설립취지 및 위원 현황, 주요 회의 내용과 각 기관·단체 현안사업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전기기 정책연구회 구성

#### ■ 목 적

- 중전기기 관련 국내 전문가에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발전방향의 모색 및 정책 반영
- 정부, 기업체, 단체 등에서 습득, 분석한 고급정보 전파
- 정부의 중전기기 시책 및 정책방향 등을 설명

#### ■ 구성 및 개최

- 산업체, 연구소, 학계, 단체 등의 국내전문가 20인 이내
  - 구성 및 선출: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함
  - 개 최: 매월 1회 개최(매월 셋째주 화요일)

#### ■ 운 영

- 정부주도가 아닌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업무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
  - 외부 저명인사 초청 업계에 유용한 정보 제공
  - 등산, 야유회 또는 해외에서 개최하는 전람회 등에 참여로 원활한 의사교류
  - 필요시 장·차관·국장 참여 격려로 산업의 관심 표명

### 주요 회의 내용

#### ■ 정책연구회 설립 취지 설명(통산부 전기공업과장)

- 중전기기 관련 국내 전문가간의 자유토론을 통하여 발전방향의 모색 및 정책 반영
- 정부, 기업체, 단체 등에서 습득 분석한 정보자료 교환 전파
- 정부의 중전기기 시책 및 정책방향 설명

■ 회장선출

- 전기진흥회 최희소 회원의 제안에 따라 수영전기기업(주) 배수익 회장을 전원 찬성으로 「중전기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선출함.

※ 앞으로 정책연구회는 회장 주관으로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함.

■ 각 기관·단체 현안 사업 발표(내용: 별첨)

- '95 전기기기 산업시책(통산부 전기공업과 김성희 사무관)
- 중전기기 기술개발자금 조성 및 활용 계획(진흥회 최희소 이사)
- 조합 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전기조합 이지수 이사)
- 「21세기 중전기기산업 발전전략」 연구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진기연구소 박충열 부장)
- '95 전국 대학교수에 대한 전력관련 기초연구비 지원계획(서울대 한민구 교수)
- 최근의 중전기기 해외정보(LG 산전 김용철 이사)

■ 토의 내용

- 해외진출 유망국에 대한 전력시스템 현황 조사  
업계 공유방안 강구(LG산전 김용철 이사)  
- 통산부, 진흥회, LG산전에서 방안 마련 2차 모임시 토론기로 함.
- 통산부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전기공업과장)
  - “엔”고의 영향과 대책
  -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외국인 연수제도 개선방안
- 정책연구회 모임행사 개최
  - 매월 1회씩 갖기로 하되 매월 셋째주 화요일 원칙
- 중소기업 보호 시책의 성급한 해제 억제
  - 수입선 다변화품목, 단체수의계약,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등 중소기업 보호시책 제도는 업계 보호차원에서 가급적 완화시기 연장 건의
- 기타 중전산업의 현황에 대한 자유토론

## 중전기 정책연구회 위원

성명	직급	소속	성명	직급	소속
홍순직	전기공업과장	생활공업국 전기공업과	김준철	대표이사	국제전기
김성희	사무관	"	박성대	"	상도전기
이홍종	"	"	배인곤	"	건양전기
한민구	교수	서울대학교 전기과	장태수	상무	광명전기
현동석	교수	한양대 전기공학과	김홍길	부장	이천전기
박상민	교수	인천대 전기과	김용철	이사	LG산전
박충열	부장	전기연구소	안승무	부장	효성중공업
이성연	기술부장	한전배전처	유정철	부장	현대중공업
배수억	회장	수영전기	최희소	이사	전기진흥회
유문영	대표이사	유호전기	이지수	"	전기조합

## 각 기관·단체 현안사업 발표 내용

## ■ 중전기 산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방안

## 가. 기금조성 추진 경위

-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전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91~'95년까지 약 1,000억원 규모의 R&D 자금을 지원
- 기술개발 완료후 지원금액의 50~60%를 기술료로 한전에 상환케 되어 있으나 이를 민간기금 형태로 중전업계 기술개발 기금을 조성 운영키로 확정
- '94. 12. 6 한전 이사회에서 『기금조성 지원방침』 확정

## - 기금관리 기관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나. 민간기금 조성 규모(억원)

'95	'96	'97	'98	'99이후	계
0.6	15.5	23.4	49.2	304.3	393

## 다. 향후계획

- 전기공업진흥회에 기금관리기구 설치 및 기금관리방안 강구
- 업계에 5% 내외의 금리로 지원하여 기금잠식 없이 운용

## 라. 기대효과

-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5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민간기금』의 조성은 최초의 획기적 조치로서
- 앞으로 중전기 업계의 안정적인 기술개발비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업계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개발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가. 목적

-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이 의식개혁을 통하여 세계화에 적극 동참
- 조합운영의 민주화와 조합원의 화합 도모

나. 구성

- 기구명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개혁추진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 (주)대화기연 대표 김성현
  - 사무국장 : 삼성전기(주) 대표 이삼암
  - 위 원 : 조합원사중 13명(위원장이 선임)

다. 담당업무

- 회원사의 기술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유도하여 세계일류화 기업으로 육성토록 유도
-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합원의 친목도모
- 공동판매, 공동구매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생산원가 절감
-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촉진단 파견 활성화

■ 『21세기를 향한 중전기 산업의 발전전략』 연구용역 추진 현황

가. 연구기간 : '94. 6. 1~'95. 5. 31(1년간)

나. 연구기관 : 통상산업부, 한전, 진흥회, 전기조합, 기초전력(연), 전기(연)

다. 2000년대 목표

구 분	현 재	21 세 기 초
과 학 기 술 능 력	세계 15 위국	G 7 수 준
중 전 기 기 산 업	세계 12 위국	세계 8 위국
○ 기술 수준	○ 선진국의 50%	○ 선진국의 90%
○ 생산량	○ 57억 \$	○ 200억 \$
○ 세계시장 점유율	○ 2.2%	○ 4.4%
○ 무역수지	○ 적자 8억 \$	○ 흑자 10억 \$
○ 전력기기 전자화율	○ 20%	○ 50%
○ 최고 전압기기	○ 345KV	○ 765KV
○ 발전 설비량	○ 2,175만 KW	○ 4,506만 KW
○ R&D(매출액 대비)	○ 3%	○ 4%
○ 기술 수출·입	○ 기술 도입	○ 기술 수출
○ 시험 불량율	○ 검사시험 3%	○ 0.2% 이하
	○ 개발시험 8%	

※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위스, 화란, 캐나다, 스웨덴, 소련

## 라. 연구내용 및 목표

- 중전기산업의 국내외 일반현황 및 동향 조사·분석
-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외 기술수준 조사, 분석 및 핵심기술 도출
- 중전기산업의 대외경쟁력 실태파악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제시
- 한전의 중전기분야 기술개발 방향 제시 및 중전기산업 발전전략과의 연계
- 중전기산업의 중장기 수립

## 마. 추진전략

- 중전기산업에 관련된 정부·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 추진
- 국내외 중전기산업 분야의 기술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수집 분석
- 중전기분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받아 현안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 모색

## 바. 세부 추진내용

추진내용	세부내용	비고
중전기 산업의 국내외 일반현황 조사·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중전기 산업의 역사와 변천추이</li> <li>○ 국내 전기공업 및 중전기 산업의 범위</li> <li>○ 국내 중전기 산업의 생산기반 실태</li> <li>○ 국제 경제 여건 동향</li> <li>○ 주요 선진국의 중전기 산업동향</li> <li>○ 중전기 산업의 세계동향과 정책의 시사점</li> </ul>	전기연, 진흥회, 조합
중전기 국내외 기술 수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개발 일반동향</li> <li>○ 중전기 기술의 분류</li> <li>○ 품목별 기술개발 현황 및 동향</li> </ul>	전기연
중전기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제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전기 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li> <li>○ 중전기 산업의 대외경쟁력 분석</li> <li>○ 한전의 중전기 분야 기술개발 실태 파악</li> </ul>	기초연



■ '95년 전국대학의 전력관련 기초연구비 지원 계획

가. 지원배경

- 전력기술은 가장 중요한 기반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처 및 교육부에서는 첨단 분야로 인식되지 않아 연구비 지원이 충분치 않음을 인지하여
- 통상산업부(구 동력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92년도 부터 지원하기로 함

나. 지원대상

- 대학원이 설치된 전국 공과대학 중 전력기술 관련학과의 대학원 석·박사학위 논문지도교수 또는 대학원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최근 3년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발표 및 게재한 실적이 있는 교수

다. 지원대상 연구과제 성격 및 분야

- 성격
  - 전력기술과 직접 관련되는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한 과제
  - 장래 전력기술의 대형 복합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선행 성격의 과제
  - 연구수행 효과가 전력산업 및 관련 산업분야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분야

- 수화력발전, 송변전 및 배전기술 분야
- 원자력 발전 및 방사선 관리기술 분야
- 전기에너지 절약 및 합리적 이용기술 분야

라. 과제당 지원금액

- 단기기초과제 : 연구기간 1년, 과제당 1,000만원 정도
- 중기기초과제 : 연구기간 3년이내, 세부과제당 년 1,000만원 정도

마. 연구과제 관리

- 운영기준에 의거 산·학·연이 공동참여 하여 과제 심의 연구비 지급, 연구결과 평가, 결과 활용 홍보등
- 연구완료후 국내외 전문 학술지등에 게재토록 의무화, 특히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술회지등에 발표 및 게재토록 유도

바. 지원실적 및 성과

○ 년도별 지원현황

구분		년도			
		'92	'93	'94	'95(계획)
지 원 기 간		92.8~93.7	93.8~94.7	94.9~95.8	상반기중
지 원 규 모		6억원	10억원	15억원	22억원
지 원 과제수	단기과제	61개과제	98개 과제	101개 과제	100개 과제
	중기과제			12개 과제	26개 과제
지 원 대 학 수		35개 대학	41개 대학	39개 대학	

○ 논문발표 게재 실적

구분		년도		
		'92년도 지원	'93년도 지원	누 계
논문게재 또는 논문발표	국내	55건	40건	95건
	국외	12건	3건	15건
합		67건	43건	110건

※ '92년도 지원사업중 특허출원은 3건임

※ '93년도 사업이 '94. 7 완료되었으므로, 향후 논문발표, 특허출원은 증가될 전망이다

○ 지원성과

- 학술(회)지 발표 및 게재등으로 학문발전에 기여
- 대학의 전력기술 기초연구 활성화
-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연구참여로 전력분야 기술인력 양성

■ 중전기업계 해외동향

가. 해외시장 현황

중전기기의 세계시장 규모는 6.7% 성장하여 2001년에는 4,500억 \$로 예상되며, 발전소 건설계획은 향후 10년에 걸쳐 시설용량이 거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125GW)을 위시하여 인도(25GW), 인도네시아 (12GW), 말레이시아(10GW), 필리핀(5.9GW), 태국(10GW) 등 동남아시아의 발전, 송전, 배전, 전력계통분야의 성장전망은 10%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시장도 매년 4기 정도의 발전소를 신설하여 93~2002년 동안 무려 22GW의 발전소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발전설비 시장규모는(100MW 1기의 건설비용이 약 1억 \$이므로) 250억 \$ /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배전 및 전력계통 설비, PLANT 설비에 소요되는 중전기기를 포함하면 900억 \$ 내외로 '97년 세계시장 규모를 3,000 \$로 예상하므로 30%이상 되는 시장임

나. 국내 중전기 업체의 수출실적

국내 중전기 업체의 수출대상국은 동남아시아가 주류를 이루며, '94년 통계에 의하면 중전기(전선포함) 분야의 총 생산액은 49억 \$ 정도이며 수출은 11억 \$ 내외이다.

수출분야의 내용을 보면 국내업체의 동남아시아 시장 점유율은 2% 정도로 예상되나 발전 설비 분야의 시장진출이 매우 저조한 관계로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송배전 분야에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익구조는 빈약한 편이다.

수출되는 주요품목은 전선, 배전반,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등 단품이 대부분이며 Turn-Key Base의 수주는 단위변전소 정도임

다. 세계 유수 중전기기 업체의 특징

- ① 풍부한 자금력(LOAN제공)과 BRAND 이미지로 시장 NEED 선도
- ② 발·변전설비 일괄 수행능력 보유

(사업입안 → 자금제공 → 자재 SUPPLY → 공사, 시공, 감리)

③ 주요 시장에 생산기지 구축(생산-판매-서비스의 LOCAL화)

④ 시장 NEED에 일치하는 완벽한 제품보유

(542KV EQUIPMENT → L.V EQUIPMENT)

회 사	주 요 제 품 군	전 략
SIMENS	고속전철, 제어계측기, 통신기기, 전 기전자 산업용 기계설비	최고품질, 기술, Ser- vice
A B B	발, 송, 배전설비, 산업 및 환경설비	세계화, 지역화
G.E	발전, 항공, 가전, 산업기기	합리화, 근대화
ALSTHOM	고속전출, 발전, 전지, 통신	전략적인 제휴, 합병, 제휴
히다치, 도시바, 미쓰비시등 일본기업	중전기, 산업기기, 계장기기	부품 해외조달, 현지화

라. 바람직한 수출전략

중전기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내구성, 성능보장, 안정성등이 크게 요구되는 산업이며, 제  
품의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여 표준화 규격화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계기술/규격의 원천을 보면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BS/ANSI/IEEE/CSA 규  
격문화권, 유럽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IEC/DIN 규격 문화권 그리고 일본의  
JIS/JEC/JEM 규격문화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수출전략은

① 각 문화권마다 정격, 시험특성, 사양이 상이하므로 각 수출대상국별로 그 나라에서 적용되  
고 있는 규격에 따라 차별화 대응

② 기본 설계시 주요정격/특성이 결정되므로 Engineering사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③ 단품보다는 Project성 수주로 Scale Merit와 부가가치확보 차원에서 각 업체별로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컨소시엄 형성

④ 현지 정보의 최대한 활용으로 정확한 대응전략 수립 및 현지화 추진

⑤ 국내는 최근 대형 Project 건설경험이 많으므로 Know-How를 살려서 각 산업군 마다  
Leader를 선정 Turn-Key 수주작전 전개

(예 : 발전설비 → 한진, 한기, 제철설비 → 포스코개발등)

# 技術 하부구조 확충 5개년 計劃 수립

## — 通産部, 95년 産業技術 時策 발표 —

통상산업부는 기술획득과 기술기반 조성을 금년도 산업기술 정책의 양대 목표로 설정하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1천8백88억원, 공업발전기금 1천6백65억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95억원 등 각종 기술개발사업에 총 4천6백3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우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경쟁원리를 폭넓게 적용키로 하고 주관기관 참여대상 확대와 연구개발사업에 복수 참여, 자유응모제 도입, 경쟁평가제 도입 등을 실시해 사업추진체제를 정비, 산업별 기술개발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8월까지 산업기술발전 5개년(95~99년)계획을 수립, 국가자원을 기술기반구조의 확충과 전략적인 기술개발 투자쪽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산업기술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국제공동연구와 APEC 테크노마트 등을 통한 국제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국내기업의 선진기술 획득 능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말 제정된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96~2000년)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경에 「한국공학원」을 설립, 국내외 산업기술 변화에 대한 추이를 분석해 산업기술개발 전략 및 정책 등을 제시하고 산업계의 기술교류를 증진시키는 전문기관으로 육성시키는 한편 「올해의 기술인賞」을 제정해 산업기술개발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기술 보육사업, 기술거래시장의 설치 등 기술확산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술개발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 地方 中小企業 수출기업 育成

### — 通産部, 95년도 중소기업 輸出企業化사업 확정 —

통상산업부는 올해 162개 지방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통산부는 '95년도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은 수출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해외 마케팅 능력과 수출기반이 취약해 수출을 못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을 기초단계부터 2년동안 육성해 수출기업으로서의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통산부는 우선 기초능력 배양이 필요한 1차 육성대상 기업 90개사를 4월 15일 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기초능력 배양 내용은 무역실무교육, 상품카탈로그 제작, 상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도, 해외시장조사 등이며 무역진흥공사 지방무역관에서 수시로 업체를 방문, 기업실적에 맞는 지도를 하게 된다.

또 지난해 선정돼 해외시장조사, 상품 디자인 개발 등 1년차를 마치고 해외진출 단계에 진입한 72개사에 대해서는 시장개척단 파견, 전시·박람회 참가, 해외 무역관에 임직원 파견을 통한 세일즈 실무훈련 등의 과정을 거쳐 전문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올해 신규 육성 대상업체 90개사는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중 對日수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하며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각 시·도가 협의해 선정한다.

## 新엔高 産業構造조정 계기 활용

### — 政府, 中·長期 품질·기술 競爭力 확보 —

정부는 최근의 新엔高를 산업구조 조정 및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우리 경제가 80년대 후반의 엔高 때 단기적 수출증대에만 집착해 이를 기술개발, 품질향상, 합리화, 고도화투자 등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으며 엔高종료 후 경쟁력의 급속한 약화에 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의 新엔高에 있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경쟁력을 근원적으로 제고하고 산업구조 전반의 고도화를 이루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이번 엔高에 대응, 일본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수반한 해외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이들 기업을 국내에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기업의 유치가 국내 산업경쟁력을 빠른 시간내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 평동과 천안 외국인 전용공단의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개선내용에는 세제혜택 등의 이미 알려진 우대책 이외에도 입주기업에 대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예외적용(부품·시설재), 상업차관의 원자재까지 확대, 공장용지임대비율 상향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아직 구체 검토단계에 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천안공단은 아예 일본기업 전용공단으로 만든다는 구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對日무역역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를 통해 자본재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2차 국산화 5개년 계획' 추진 이외에 3천만달러 이상의 수입품목에 대해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韓·日모텔중소기업 사업 확대, 시제품 개발 자금확대(96년 2천억),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 추가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엔高 효과가 남아있는 시기에 비가격경쟁력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하에 스테크노마트 개척 등 기술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불량률 100PPM(불량률을 100만개중 100개로 줄임) △ISO인증 확산을 통한 품질향상 △물류 효율화를 통한 부대비용 절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엔高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일본시장 개척에 나서는 한편 중국·아세안 등 제3시장에 대한 수출보험·연불금융·대외경험기금 확대 등을 통해 수출증대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11월에는 일본기업의 한국부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쿄에서 한국 부품종합전을 개최하며 對日수출유망 10대상품과 전문업체에 시장개척기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 발전시설 지역 기업설립 자금지원 - 통산부, 100만KW 이상 지역 저리 지원 -

통상산업부는 발전시설 규모가 1백만KW 이상인 지역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기존기업 포함)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전기요금을 60%정도 깎아주기로 했다.

통산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소입지 확보차원에서 이처럼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하고 관련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우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규모를 현재 한전의 전전년도 전기판매 수입대금의 0.5%(95년 기준 3백73억원)에서 0.8%(5백96억원)로 확대했다.

이자금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업 육영사업등에 쓰는 이른바 개발지원금의 10%를 1백만KW이상 발전소 주변지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전기요금은 原電에서 반경 5km이내의 지역및 동일한 里 洞지역에 대해 주택용과 산업용을 평균 60% 경감하는 방식으로 보조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발전소가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발전소 건설비용의 1%이내에서 특별지원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또 발전소 규모에 따라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까지 지원, 이자금을 주거환경 개선등에 쓰도록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지난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연도별 지원금액은 92년 1백36억원, 93년 1백 81억원, 94년 2백47억원등이다.

## 기술도입 申告制 폐지 - 防産 · 우주항공 · 원자력산업 제외 -

4月 부터 기술도입에 대한 주무부 신고제도가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산업구조 고도화및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추세에 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무부 신고제 폐지 ▲고도기술 개편등을 주골자로 한 기술도입 개선방안을 마련, 4月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은 계약(지급)기간이 1년이상으로서 △착수금 5만달러이상이면서 순매출 3% 이상인 경상기술료 △고도기술조세감면 신청 △방위산업 기술도입 등인 경우에 계약을 맺은 다음 반드시 주무부에 신고해 수리받도록 하고 있다.

재경원은 기술도입 절차간소화를 위해 이같은 기술도입 신고수리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방위산업, 우주항공, 원자력 등 3개 산업과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기로 했다.

작년 6월에 少額기술도입에 대한 기업의 계약인증제가 폐지되고 4월 부터 주무부 신고제도 까지 폐지되어 해외기술도입은 로열티(기술사용료)를 지급시 외국환은행에서 지급인증을 받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끝나게 됐다.

정부관계자는 “부처간 기술도입 절차 간소화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환경기술등에 대해서도 기술도입 신고제를 유지하고 정액기술료가 1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도 신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폐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산·원자력·우주항공등에 대한 기술도입 신고제를 유지한 것은 안보와 관련기술에 대한 재정지원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기술도입 절차간소화와 함께 조세감면, 상업차관 도입, 공장입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고도기술을 개편해 4월부터 시행기로 했다.

현행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은 제조업 7개산업 80개사업, 서비스업 3개사업이 지정돼 있으나 정부는 이를 첨단고도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금명간 발표할 계획이다.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주어지는 조세지원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간(최초 이익 발생년도 기준) 100% 감면,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특소세 100% 감면등이다.

## 外貨표시 국산기계자금 추가 지원

### — 財經院, 3천억원 신규 지원 —

정부는 엔고에 따른 기계국산화 촉진을 위해 올해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 3천억원을 신규지원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엔고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설비의 수입가격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국산기계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엔고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산기계 구입자에게 지원하는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지원 규모는 3천억원선을 고려하고 있다. 3천억원이 추가지원되면 작년에 용자승인해 아직 집행되지 않은 4천2백억원(중소기업 자동화사업용 1천2백억원 포함)과 합쳐 올해 모두 7천2백억원이 용자되게 된다.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 자금은 금리(리보에 2% 포인트 가산)가 낮은데다 달러환율을 기준으로 값게 돼있어 요즘처럼 달러貨가 약세일 때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자금이다. 이 자금은 93년부터 지원했었으나 올해부터 신규배정을 중단, 기존배정분만 집행하고 있다.

## ISO 획득 비용 세액 공제 혜택

### - 기술개발준비금이용 · 기술인력개발비 控除혜택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품질보증체제인 ISO9000시리즈를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기술개발 준비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15~50%의 기술인력개발 비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중소기업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년도부터 5년간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중소기업 세제지원책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우선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입주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법인세 · 소득세 감면혜택은 △정읍 제2공업단지 △정읍 제3공업단지 △대불공업단지 △북평국가공업단지 △북평지방공업단지 등 5개 공단에 적용된다.

정부는 또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해 ISO9000 품질인증시리즈 획득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기술개발준비금 충당은 일반기업의 경우는 收入금액의 3%까지, 첨단산업은 4%까지 허용돼 이 범위내의 준비금 적립이 과세소득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된다.

ISO획득을 위해 기술인력개발비가 실제로 지출됐을 경우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에 따라 15%(고정지출) - 50%(증가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ISO획득비용 지출을 인정하는 범위는 △품질경영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 비용 △연수기관의 지도 및 연수비용 등이다.

또 이같은 세제지원이 주어지는 ISO9000시리즈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만든 품질경영에 관한 국제표준규격인 ISO9001(설계·개발·제조·설치·관리분야), ISO9002(제조·설치·관리 분야), ISO9003(최종검사및 시험분야), ISO9004(서비스·프로젝트관리분야)등 네가지다.

재경원은 중소기업 ISO획득에 대해 조세지원을 실시키로 한 것은 품질경영분야 전문인력이 교육 개발, 전문진단기관의 진단, 인증기관의 심사 등 다단계를 거쳐야 하고 비용부담이 큰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 工場·부설연구소 부지 3년간 非業務用 판정유예 — 法人稅法 시행규칙 개정 방침 —

공장·기업부설 연구소 부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이 현재의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89년 12월 이전에 지은 무허가 건물도 공장으로 등록돼 있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올라있으면 건축물로 인정돼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공장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원은 오는 7월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기업의 업무용 토지확보를 돕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작년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과 일치시켜 시행키로 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시설확장 및 각종 건축관련 허가절차 소요기간 등을 감안, 공장·기업부설 연구소·주택신축용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도로·항만·공항 유통단지 등 민자유치 사업용 토지도 3년간의 유예기간이 허용된다.

그러나 일반건축물 신축용지와 건설업체 상가 등 기타 건물 신축용지는 지금까지와 각각 1년 및 2년 동안만 비업무용 판정이 미뤄진다.

현재 공장용 신축용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은 철강·조선·기계·전자·화학·섬유, 아파트형 공장, 기업부설 연구소가 각 2년, 기타업종은 1년으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비업무용 토지 가운데 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제한일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 판정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사용제한이 풀리면 해제일로부터 일반유예기간(1~3년)을 적용토록 했다.

건물이 소실·철거됐으면 이때부터 2년간, 토지구획장려사업지구내의 토지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년간씩 비업무용 판정을 미뤘으나 이들 토지중 공장용지·주택신축용지·기업연구소용 부지 등은 3년으로 1년연장됐다.

특히 공업단지관리공단의 분양전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제외기간은 사업허가일로부터 5년간이었으나 공업단지 분양후 환수한 토지 및 대덕연구단지내 연구기관이 불가피하게 소유한 녹지 등 원형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현재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공장 등의 기준면적 산출에 적용되는 연면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은 지난 89년 12월 이전에 건축되고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에 한해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 기업애로 技術지도 — 工振廳, 3月中 700社 선정 —

공업진흥청은 3월중 700개 업체를 선정,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타개하기 위한 기술지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진청은 현재 기술지도 대상 업체로 생산자단체, 지방공단 등으로 부터 1110개 업체를 추천받았는데 3월중 공업기술원 주관하에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통해 외국유명기업과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도대상 업체들은 기술개선, 신제품개발, 품질고급화 등을 위한 장단기 지도를 받게 된다.

공진청은 효율적인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대상 업체의 제품과 외국 유명제품의 품질을 비교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유망기술기업 추천, 병역특례 업체 지정, 단체수의 계약 우대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중이다.

## ❖ ISO 14000 표준화 추진동향과 정책방향 ❖

### I. 제도의 개요

#### 가. 형성배경

1) UN환경개발위원회(UNCED)산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산업계 회의(BCSD)”에서 환경에 대한 표준화 요청('91.6)

- 각국가마다 상이한 환경관리기법과 관리체제의 통일화 필요성 대두
- 환경보호의 인식 증가에 따라 각국의 다양해진 환경관련 규격의 조화 필요
- 각국의 강제법을 강화 추세에 따른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자율적 환경 관리체제 구축 및 환경관리 기술향상으로 실질적인 환경보호 기여

2) '92. 6월 리오 회담에서 지구촌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의 증대

3) 또한 GSTT/TBT(무역에서의 기술협력)협정 예외규정을 이용 ISO 및 IEC 두 국제기구에 서 환경관련 표준화 제정 추진

- 환경경영 표준화(ISO 14000시리즈)를 전담할 TC 207('93)

#### 나. 태동동기

1) 기업의 생산 및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환경 오염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예방

2) 기업의 환경관리체제 활동이 환경보호에 충실하므로써 수용자에게 기업의 신뢰성 확보 및 지속적 발전 유도

3) 환경관련 강제 다규격 탄생으로 국제무역의 기술적 장벽으로 대두 예방

### II. 국제환경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도입 추진

#### 가. 개요

기업등이 환경보호 및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경영자의 책임으로 환경목표(자율적)를 채택하고, 인적, 물적 및 관리적기법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체계적 지속적으로 관리·이행하고 있음을 제3자가 인증해 주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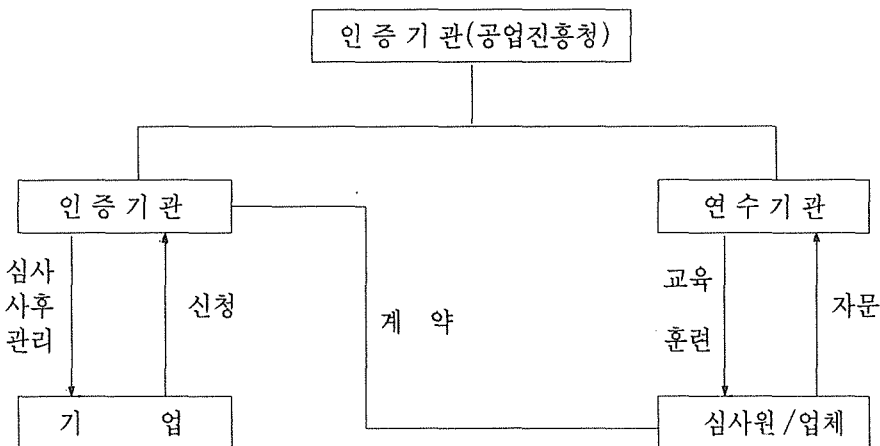
나. 제도도입의 필요성

- 1) GR에 대비한 국내 환경경영체제 구축 및 향후 국제환경경영체제 인증추세에 부응('96년)
- 2) 환경기술패권 시대에 있어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촉진
  - EU지역 및 선진국의 강제적인 환경인증 요구등의 환경기술 장벽 극복
  - 세계시장에 있어 한국기업의 환경 이미지 개선 및 환경기술발전 추진계기 마련
- 3) 국제환경경영 인증제도 실시예 사전대비하고
- 4) 구가간 상호인정 추진기반 마련
  - 국제화된 환경경영 인증체제 마련으로 선진국 인증제도와와의 동등성 확보
  - APEC등의 국제회의 환경분야에서 국제적 위상 제고

다.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1) 국내 환경경영체제의 국제화
  - 선진국에서도 인정하는 국제수준의 환경경영 인증제도로 정착 유도
- 2) '96년부터 국내인증실시를 목표로 준비
- 3) 품질보증체제(ISO 9000) 인증제도와 조화되는 제도로 구축
- 4) 환경경영 인증제도의 국가체계

※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와 동일



라. 환경경영 인증제도 도입추진 체계

**인증제도 준비('94~'95)**

1) 환경경영 시험인증 요령 제정

- EU의 환경경영 및 검사법률 등을 참고하여 국내산업계 실정에 부합되는 세부안을 마련하고 인증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안을 순회설명회를 통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환경경영 심사원 양성 및 확보

- 환경심사원 양성 및 확보 계획

구 분	'95년	'96년	비 고
심사원과정훈련	60명	140명	
심사원 확보	-	20명	

- 환경심사원 양성교육은 외국의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국내초청(영국 BSI, 호주 SAQAS등) 교육을 실시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국내 자체 양성과정으로 전환
- 현재의 ISO 9000심사원 및 환경관련 실무자중 양성과정을 이수한자를 대상으로 국내 Pilot Program 참여를 통한 실무교육 참여기회를 넓혀 기업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의 심사원 육성 추진
- 외국교육기관 및 인증실시기관 등에 파견 교육 실시

3) 인증 / 연구기관 육성 및 확보

- 현재의 품질인증 / 연구기관을 업무확대 및 별도의 환경전문기관을 육성 지정('96까지 7개기관 확보)

**시험인증 실시('95~'96)**

1) 환경경영 시험인증 실시

- 목적

국내 환경경영 인증제도의 본격 실시에 대비 제도 시행으로 나타날 문제점을 발굴 및 개선을 통하여 시행착오의 사전 예방

○ 추진일정

- 시험여건 조성 및 준비 : ~'95. 6월
- 적용기간 : 6개월 ~ 1년 ('95년중)

○ 참여대상

- 환경위해 문제의 발생소지가 큰 철강, 석유화학 등을 우선선정
- 환경관련 수출업체중 ISO 9000 인증획득업체 참여유도

○ 방법

- ISO 초안 및 BS 7750 등을 참고하여 심사대상 규격마련
- 환경심사원 교육을 받은 자로 환경관련 실무가 있는자를 심사팀(5명)구성

○ 효과

- 시험인증으로 축적된 경험, 심사기법, 점검매뉴얼 등을 활용 국내 인증제도 구축에 선진화
- 돌출된 문제점을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과의 일체감 형성으로 자율적 참여 유도
- 환경경영 인증심사원 실무능력 배양

국내 인증실시('96)

1) ISO 14000 규격의 국가규격으로 채택

2) 법적 근거마련

○ 국내환경경영 인증제도의 건실한 정착과 국제제도와 부합성을 고려.

○ 각계의 의견수렴 및 가능한 대안을 고려 최선의 법적근거 마련('96년중)

3) 환경경영법에 의거 인증/연수기관, 심사원 등록등의 제도를 완비하고 인증시행

4) 환경경영 진단지도 실시

○ 진단지도 여건 조성

- 환경관련 전문기관을 후보기관으로 지정 ISO 14000 인증획득 추진을 위한 지도요원 양성 확보 독려

- 환경경영 지도요원 교육기관을 지정 양성교육 실시유도

- 전문분야별 중소기업 지도를 위한 환경인증 추진 매뉴얼 작성 보급

○ 환경경영 진단지도 실시 계획

구 분	'96년	'97년	'98년
진단지도	100업체	200업체	600업체